



ESG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 6개월 유예

Analyst 엄수진 sujineom@hanwha.com 3772 7407

▶당초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상폐 시총 기준의 적용 시기 6개월 미루기로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이 마련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는 시가총액 300억원, 코스닥시장 상장회사는 시가총액 200억원에 30거래일 연속 미달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유예기간 중 45거래일 연속으로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당초 계획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가총액 요건을 더 강화해 유가증권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으로 상향하려 했다. 그러나 벤처업계 등이 최근의 시장 상황(높은 변동성, 불균형한 수급 등)을 감안해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유예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고, 감독당국이 이를 받아들여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상폐 시총 기준 상향을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표1]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주1}
내용	· 2026년 7월 1일부터 - 유가증권시장: 300억원 - 코스닥시장: 200억원 · 2027년 1월 1일부터 - 유가증권시장: 500억원 - 코스닥시장: 300억원	· 2026년 7월 1일부터 - 유가증권시장: 300억원 - 코스닥시장: 200억원 · 2027년 7월 1일부터 - 유가증권시장: 500억원 - 코스닥시장: 300억원

주1: 9월 4일 발표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시총은 미달하지만 일정 재무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한 코넥스 이전상장 허용*

다음 ① 또는 ②의 요건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및 코스닥 기업이 이전상장을 신청할 경우 정리매매 없이 기존 가격을 유지한 채 코넥스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자본잠식 기업은 제외)

- ① 최근 3개 연도 중 2개 연도의 영업이익이 흑자
- ② 최근 3개 연도 중 1개 연도의 영업이익이 흑자*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

(*9월 4일 발표)

Comment

상장폐지 요건 중 하나로 시가총액을 고려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정상적인 국가경제 성장, 물가 상승 등을 감안했을 때 기준이 되는 시총의 절대값을 수 년에 한 번씩 상향하는 것도 합리적인 제도 관리라 볼 수 있다. 다만 개정이 지나치게 급격하게 추진되는 것은, 주가가 항상 기업의 내재가치를 안정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간과한 조치일 수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보면, 코스닥시장 상장회사가 관리종목 지정 및 형식적 상장폐지가 될 수 있는 시가총액 기준이 종전에는 40억원이었으나 2026년부터 150억원으로 갑자기 4배 가까이 증가했다. 150억원이라는 시총 기준은 불과 6개월만 적용되다가 올해 7월 1일부터는 다시 200억원으로 상향됐고, 이마저도 6개월만에 300억원으로 올리려다 벤처·중소기업계의 건의로 6개월을 미루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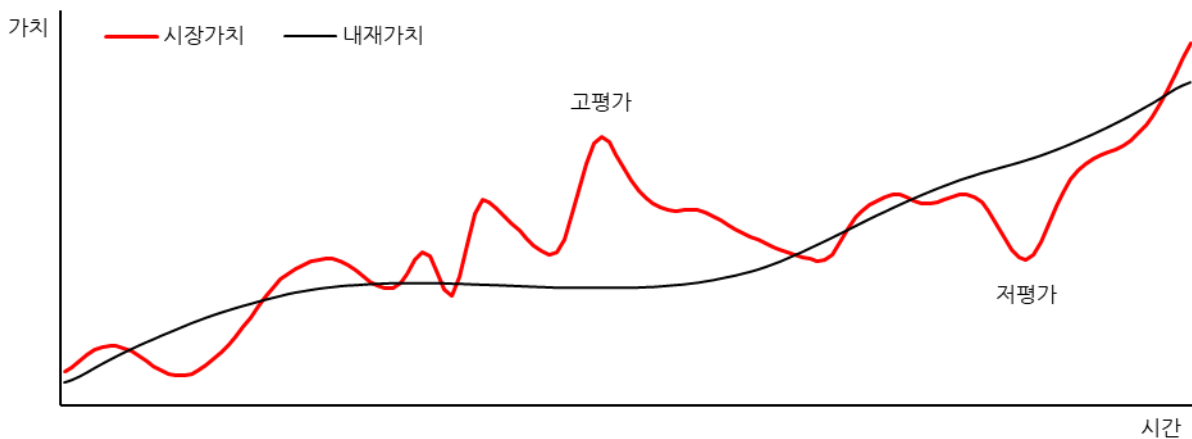
특정 기업의 주가는 장기적으로는 해당 기업의 내재가치에 점점 수렴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내재가치와 무관한 외부 요인으로 폭등락할 수 있다. 주식시장이 완벽하게 효율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주가가 기업의 내재가치보다 높거나 낮게 형성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시장참여자들은 이 고(저)평가의 원인이 항상 합리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과, 해당 기업의 수익성·성장성·건전성과 무관한 외부 요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표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 시가총액 개정 내역

적용기간	~2025.12.31	2026.1.1~2026.6.30	2026.7.1~2027.6.30	2027.7.1~
기준 시가총액	40억원	150억원	200억원	300억원

자료: 한국거래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 시가총액과 내재가치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